

# “새만금 예산 복원 없는 심사 불가”

도의회, 민주 원내지도부

찾아 당론 채택 요청

홍익표 원내대표 “예산

원상회복 당론 채택 논의”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쟁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는 예산 심사 불가 입장문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 국주영(전주11) 의장과 염연성(정읍2) 대변인, 김정기(부안) 실무주간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신영대 원내부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이원택·김수홍·윤준병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국주영은 의장 등은 “정부가 쟁버리 과행 빌미로 새만금을 희생양 삼아 34년간 지속된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쟁여 절리쳤다”며 “이는 예산 편성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전복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핑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쟁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과 면담한 뒤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계로 새만금을 통째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어 쟁여된 예산 전액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사발에 이어 4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새만금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 쟁여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정

부 예산안 협상은 불가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쟁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 78% 쟁여는 사업을 사설상 중단시키고 예산으로 지자체를 보복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잘못된 일이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만주당 당론 채택은 논의하겠다”며 “내

년도 국가 예산심의 때 전라북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전북도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비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이날 오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11월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예정된 전북 범도민 총궐기대회 참여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18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제278차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가 열린 가운데, 심민·임실군수와 도내 시·군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도내 시군의장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임실군의회는 18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제278차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심민·임실군수와 이성재·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참석해 12개 시·군 의장들을 환영했다.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장종민·김왕중 의원에게 지역사회 선진미래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전북지역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각 시·군의 공동발전 방안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이기동)는 임실군의회가 제안한 ‘섬진강 유역환경 철학 건의안’과 전주시의회가 제안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발송했다.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공조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경찰의 날 맞아

### 김희수 도의원, 전북경찰청 감사장 받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시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도의회 농산경위 심의 통과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농신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재해보험료의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보험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며, 보험료 지원범위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소통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의회

넘쳐나는 희망으로 함께하는 의회

남원시의 발전과 남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 농진청 예산 24.6% 삭감

### 국내 농업계에 큰 충격

국가R&D 예산 평균삭감률 16.6%보다 8% 높아

이원택 의원 “시급성 등 따지지 않고 물지마식 삭감

尹정부 농업홀대·농민무시 등 단편적으로 보여줘”

정부가 2024년 농촌진흥청 R&D 예산을 전년대비 24.6% 대폭 삭감해 농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립R&D 예산 평균 삭감률인 16.6%보다 8%가 높은 대폭 삭감이다.

국회 농수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따지지 아니거나, 투자우선순위조정, 과제단기조정, 시설·장비비 삭감 등 물지마식 일괄삭감으로 진행됐다.

이번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지역농업·반려동물·탄소저감·농업신동력 예산 등 거의 모든 농업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농진청 R&D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인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물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비와 과제가 각각 △79%(82 → 37억원), △65%(45 → 18개) 삭감돼 지역농업 연구는 포기한 것 아니라는 지적이다.

/부안=김석진기자

## “재배기술 연계 밭농업기계 개발 연구 강화해야”

### 민주 윤준병 의원, ‘기계화 미흡 파종·정식·수확기 중심으로’

농촌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심화되는 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나 공동경 계절근로사업 운영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작업의 기계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런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2년) 논농업 기계화율은 97.7%인데 반해 밭농업 기계화율은 59.3%로 60%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밭농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단계는 8.7%(지난 10년 평균), 수확작업은 23.8%에 머물러 있었다.

작업단계별 기계화율은 작목에 따라 서로 실마름 편차를 나타내는데, 22년도 기준 파종·정식 단계에서 콩의 경우 기계화율이 평균 37.2%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배추·고구마·무의 기계화율은 0%로 나타났다. 이들 3작목의 경우 파종·정식 단계에서 기계의

/정읍=김대환 기자

이어 윤 의원은 “쌀수급 불균형 해소와 밭작물 자급률 향상, 티작물 재배 전환사업 육성 등 밭작물 기계화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면서 “밭작물 대상 기계화율은 미흡한 파종·정식·수확기 중심으로 재배기술과 연계한 밭농업기계 개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농촌진흥청에 촉구했다.